“기무사 자료 10상자 넘어…軍도 이번기회 진실규명 의지”

이건리 국방부 5·18 특조위원장 인터뷰

특조위 전국서 활동 팀웍 좋아
필요하다면 중간 브리핑 할 것
발포명령자 규명에도 노력

이건리 국방부5·18특별조사위원장은 20일 “시대가 변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모두 5·18관련 의혹 규명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감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기무사 측이 존안자료 가운데 5·18관련 문서 전체를 (특조위에) 제출했다는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 때문”이라며 “더욱이 국회에 계류 중인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되면 최대 3년을 활동기간으로 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한다는 점도 기무사를 비롯한 군당국이 특조위의 진상규명에 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 결과를 공식발표하기 전 세부사항은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특조위는 매일 같이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 일답.

-기무사 측이 특조위에 전체자료를 제공했다는데.

▲그렇다. 기본적으로 기무사 입장도 그렇고 대통령, 국방장관, 기무사령관 모두 이번이 군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518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이다. 특히나 지금 숨겼다가 5·18특별법이 통과돼 기무사나 군이 감춘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하겠나. 군이 뒷감당하지 못한다. 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지역사회가 기무사 미공개 자료에 관심이 많다 .

▲진상규명에 활용하고 추후 절차를 거쳐 시민사회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본다. 우리도 그 점을 인정한다. 기무사 자료의 경우 저희가 대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무사에서 넘겨받은 존안자료 분량은.

▲상당히 많다. 수십권. 박스로 해도 10상자 넘는다. 구체적 언급은 곤란하다.

-기무, 감찰, 법무, 검찰 등 군과 민간조사원 등으로 꾸려졌다. 특조위 분위기는.

▲팀웍은 좋다. 기무사에서 왔건, 군 감찰·법무에서 왔건 모두 공직자다. 공직자로서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려고 한다.

-군 자료 전체를 이미 받은 건가.

▲지금 해당 부대(육군본부군사연구소 등)가 계룡대에 있어 확인 중이다. 해군은 대상이 아니고 육군과 공군에 집중될 것이다. 5공청문회(국회 광주청문회), 12·12, 5·18수사와 재판, 2007 국방부과거사위 당시 제출된 자료와 증언도 저희가 다시 검토한다. 그때 판단이 모두 옳았는지, 간과한 것은 없는 건지 들여다 본다. 과거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서, 증언, 광주 의료인, 언론인 등을 통해 많은 정보와 자료를 확보할 것이다.

-위원장 포함 36명의 특조위 조직 외에 조력자있나.

▲그렇진 않다. 다만 작은 부분은 군에게서 일부 도움받을 수 있지 않겠나. 지금 광주를 비롯 다양한 언론에서 518의혹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 언론에서 보유한 자료도 있을 것으로 본다. 방향과 자료를 적극 제시해달라. 검토하겠다.

-특조위 중간 브리핑 예정하나.

▲날짜는 특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단정하기 힘들다. 저희는 지금 전국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조사위원, 조사원 등 비취인가(비밀취급인가) 절차 밟고 있나.

▲저마다 (비밀 등급별 접근권한) 등급은 다르다. 진행 중이다.

-전체적으로 군이 제공한 자료는 만족스럽나.

▲현재 다 확보된 게 아니다. 일부씩 받고 보고 있다. 만족할 수준이다 아니다 언급할 단계 아니다.

-헬기사격, 전투기 출격대기 의혹 등 2가지 임무도 기한 내 힘들어보이는데, 암매장 의혹, 발포명령자 규명 등 여러 의혹을 규명해야한다고 촉구하는데 어떤 입장인가.

▲그렇다. 저희들 정말 여러 계통과 방법으로 정보에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나, 한계가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믿고 지켜봐달라는 말씀밖에 드릴게 없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검찰권력 국민에게 되돌려줄 마지막 기회

공수처,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❹ 검찰·야당·검찰출신 의원 ‘3大 장벽’ 넘어라

DJ정부서 시작 20년간 시도
관련 법률안 13건 발의 무산
촛불이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여론조사도 최대 87% 찬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패범죄의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필수적인 기구라는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공수처 설치는 김대중 정부 말기부터 20년 가까이 시도됐지만, 검찰과 보수정당(현 자유한국당), 검찰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회의원의 강력한 반대로 매번 좌초됐다.

제15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이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기관 설치와 관련된 법률안은 제20대 국회까지 모두 13건이 발의됐다. 특히 제17대 국회에서 정부가 공직부패수사처를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이후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공수처 설치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면서 겉돌기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법률 권고안을 제시하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갔는데도, 실제 국회 입법을 거쳐 공수처가 정식으로 가동하기 위해선 최소한 이들 3대 장벽을 넘어서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 공수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포진해 공수처 관련 법안 심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부정적 여론 조성에 앞장서 왔다. 현 상황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검사출신 의원들과 전직 검사인 홍준표 대표 등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9일 페이스북에 “푸들로도 충분한데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가”라며 정부의 공수처 신설 계획을 비판했다. 홍 대표는 기존 검찰 조직을 ‘푸들’, 새로 생기는 공수처를 ‘맹견’에 각각 비유하면서 공수처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외 함께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과 법사위 주광덕 의원 등 다른 검찰 출신 의원들도 공수처 신설에 다소 부정적인 입장인 점도 악재로 꼽힌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현 국회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검사 출신 의원이 많고, 이들 대부분은 당론인 공수처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과 맞물려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그어느 때보다 단호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공수처 권고안과 관련해 “권고안 기본적인 틀을 존중하며, (권고안의)취지를 반영해 법무부안(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공수처 설치 의지를 다졌다.

박 장관은 또 “법무부는 정부 입법을 추진하기보다는 권고안을 낼 생각이며, 국회에 제출된 3개의 공수처 법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특히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단호한 어조로 “그렇다”고 답한 뒤 “법무부 차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이 구성돼 있는 만큼 (권고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20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법안이 발의된 이후 리얼미터 등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대 87%까지 대부분의 국민이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만큼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면서 “특히 여야를 떠나 검찰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법안 통과에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방송 콘텐츠 체험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 광주 ACE FAIR’를 찾은 관람객들이 방송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